

“목숨걸고 멧돼지 잡았더니 갑질로 보답?”

여수유해조수구제 4개 단체 협사 50여명, 부당행정 고발·봉사 거부

여수시 “협회가 많이 생기다보니 구제단 협사 선정과정 문제 심각”



여수시 유해조수관리협의회 회원이 2일 여수시청 정문에서 사냥개를 끌고 나와 여수시의 유해조수퇴치 행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밤낮 가리지 않고 위험한 멧돼지 퇴치에 나섰지만, 이젠 여수시 갑질 행정에 봉사활동을 그만 접겠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야생 멧돼지 등 유해 조수가 출몰 했을 때 사냥총을 들고 사냥개와 함께 출몰했던 유해조수 구제단 일부 협사들이 여수시의 부당 행정을 고발하면서 사냥 포기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여수시와 여수시 유해조수 관

리협의회에 따르면 여수지역 유해조수구제단 소속 일부 협사들이 부당한 행정을 참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멧돼지 등 유해조수 퇴치 봉사활동을 거부하고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50여 명의 협사들로 구성된 여수시 유해조수관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 유해 조수퇴치 관련 부당 행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협사들은 개당 200여만 원에 이르는 멧돼지 포획 틀의 실효성 및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여수시가 80여 개의 야생조수 포획틀을 설치해 왔으나, 지난해 잡힌 300여 마리의 멧돼지 가운데 포획 틀에 잡힌 멧돼지는 10여 마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예산과 비용을 들여 야생조수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도 멧돼지 퇴치에 효과가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지 않아서 부서지고 녹슨 채 방치되고 있는 것도 부지기수라는 주장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포획 후 위생매립장에 신고 후 매립해야 하지만, 농가에서 식용으로 먹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정인에 집중되는 특혜성 사업 추진 주장도 의혹으로 이어졌다. 여수시 유해조수 관리협의회는 “4개의 포획 틀에 13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고 없이 특정인들에게 배정해 관리하면서, 포획 틀에서 잡은 멧돼지 운반비 명목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지급해 예산 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기 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한 업무 추진 시 협의회와 협의

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간담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신뢰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일부터 시청 앞에서 사냥개를 동반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현재 거론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기후생태과 관계자는 협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기후생태과의 야생조수포획틀은 20대이며, 66대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에게 지급한 보조금과 농민 자부담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획틀 1대당 190만 원 정도로 총 구입비는 760만 원이 소요됐으며 별도로 먹이구입비가 138만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1300만 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기후생태과 관계자는 “야생유해조수 협회가 많이 생기고 협사들이 많다 보니 구제단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유해조수 관리협의회는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유해조수관리협회, 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전남농산물유해구제협회, 야생동물피해관리회 등 5개 단체 소속 50여 명의 협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25명의 회원이 1인당 100여 차례의 농촌 피해 현장에 출동해 267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기동취재본부

가상캐릭터 투자 미끼로 22명에 4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전남 순천경찰서는 가상 캐릭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 을 받아 쟁전 A(44) 씨 등 2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2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앱 개발업체 대표인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구에 본점을 두고 고수익의 가상캐릭터 투자를 미끼로 모집한 회원 22명이 투자한 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순천시 연향동 일대에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으며, 이후 대구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4개 등급의 가상 캐릭터에 투자하면 등급이 올라갈 수록 12%에서 최대 18%까지 이자를 돌려준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에게 2~3개월 정도 수익금을 돌려준 뒤에는 투자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순천경찰서는 송치와 함께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완도 해상서 오염물질 ‘검댕’ 배출 50대 선주 입건

전남 완도 해상에서 해상-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선박유 찌꺼기 등을 무단 배출한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검은 기름 등 이른바 ‘검댕’을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주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완도군 완도를 완도항 해조류센터 앞 바다에서 9.77t 급 낚시 어선을 몰던 중 검은 기름 찌꺼기 ‘검댕’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다. 해상에 ‘검댕’이 부유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곧바로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항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선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항만 구역은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미세먼지 유발 요인이 배출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를 끼치고 어업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앞으로 검댕, 매연 배출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단속현장 차 돌려 줄행랑, 사고 낸 40대 집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주차된 차량을 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모 기업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 반대 차로로 회전해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순찰차의 추격을 받는 과정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특히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함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주진모 해킹’ 가족 공갈단, 2심도 실행...“죄질 나쁘다”

주진모 등 휴대전화 등 해킹해 돈 요구

배우 주진모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자료를 바탕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32)씨와 남편 박모(41)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언니 부부 중

남편 문모(41)씨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던 언니 김모(35)씨 역시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이 변화가 없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함의를 한 점이 유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모두 1심에서 반영됐다”

며 “1심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협박받은 연예인 중 5명이 총 6억1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들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를 해킹하면 김씨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

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와 언니 부부는 중국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을 유도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뒤,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공갈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며 김씨 부부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